

원유관세 인하... 향후 정유업계의 대응방향은?

關稅率

글·여영래 |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부 기자(석유·자원팀)

요즘 들어 국내 정유사들과 그 단체인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들의 면면이 모처럼 생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그 동안 계속되는 석유 수요 둔화와 석유수입사들의 시장 잠식 등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이에 더하여 SK사태 등으로 밝지만 않은 모습들이었으나 최근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단행하고 나선 원유 관세율 인하, 석유수입부과금 하향조정(원유), '정부發 희소식'에 상당 고무됐기 때문.

특히 원유 관세율 인하(중전 5%에서 3%할당관세 적용) 문제는 석유협회를 중심으로 정유업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온 숙원과제였으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제당국에 번번히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고배를 마셔야했던 업계 숙원 과제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금번 정부의 인하조치는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활력소가 됐음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유업계가 그 동안 정부를 상대로 줄기차게 주창해온 원유·석유제품간의 관세 차등화 요구는 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석유수입사업계에는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현행 국내외 관세체계상에도 상당 부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유관세 인하, 국내외 관세율 체계에 부합”

정유업계는 원유 무관세화 등 관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등 주요 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은 대부분 원유의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우선 관세체계의 국제표준에 부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OECD 30개 가입국중 원유 관세부과국은 멕시코(10%), 한국(5%), 일본(0.9%), 미국(0.3%) 등 4개국에 불과하며 나머지 24개국은 무세(無稅) 대상이라는 것.

또한 정유업계는 수입 원자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내 관세율 체계에 있어서도 원재료 0~2%, 1차 가공품 5%, 완제품 8% 등의 수준으로 원재료에는 낮은 관세율이, 완제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비춰볼 때, 유독 원유만은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원재료·제품간의 관세부과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철광석(원재료) 1%의 관세에서 철(1차 가공품) 3%, 철강제품(완제품) 8% 등의 수준으로 부과 관세율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원유에만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업계는 원유 무관세화등 관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등 주요 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은 대부분 원유의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우선 관세체계의 국제표준에 부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업계는 현재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차(4%P)는 국내 정유사들의 가동률 저하 및 주변국 정제업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 국내 기업에 오히려 역차별 효과를 불러일으켜 일본,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석유완제품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점도 들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는 이처럼 원유관세 인하시 가장 먼저 대두되는 사안이 세수감소 문제로 원유 관세를 2%P 인하했을시 이들 업계가 자체 추산한 세수감소액 규모는 연간 약 7300억원 규모이나 이같은 세수감소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세계개편에 의한 석유부문의 내국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증가(2002년 2조1000억원에서 2004년 7조3000억원, 2006년 10조5000억원)로 충분히 상쇄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다시 말해 단순 세수감소분에 대한 논리에 의하면 원유관세 인하로 연간 약 7300억원의 세수감소는 에너지세계개편 프로그램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연평균 5조7000억원의 내국세 증가로 벌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유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원유관세 인하조치가 정유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떠올라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의혹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곱지 않은 여론의 향방을 의식, 원유관세 인하시 그 인하폭만큼 즉각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정유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요구책이 아니라 국내 정유산업이 주변 경쟁국과의 상호 경쟁에 있어 '기본틀'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이외는 다른 의미가 없음을 극구 강조하고 나서는 등 만의하나 역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견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반기 석유업계 핫-이슈 재등장 불가피 할듯”

이와 같은 정유업계의 거듭된 주장과 이번 정부의 원유관세율 인하(할당관세 3%적용)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석유수입사들은 지난 6월 초순(11일) 발족한 석유수출입협회를 통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석유수출입협회는 재정부의 원유 관세인하조치가 나온 직후 즉각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 차등화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원유·석유제품간 관세 차등폭 확대) 1990년대 중반이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 시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이는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체제를 시장감시자인 정부가 스스로 개입해 무너뜨리는 것으로 석유수입사들의 시장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원유·제품간 관세 차등 폭의 확대 문제는 정부가 일단 정유업계의 주장을 수용,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일단락 됐다. 그러나 정부의 금번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묶여져 있어 올 하반기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등 이래저래 석유업계의 핫-이슈로 재등장할 것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국내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 추진 당시 '잘못된 옷단추'의 후유증이 이처럼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된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정부 정책당국의 해안을 기대해 본다. 🍀